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 2019년 8월 29일(목)

CONTENTS

-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 배경, 의도, 파장
- ‘강대강’ 대응으로 일본 수출규제 고착화 우려
- 확대되는 1인 가구와 보수주의 가족가치

이슈브리프

(IB 2019-06)

CONTENTS

- I.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배경, 의도, 파장 / 1
 - II. ‘강대강’ 대응으로 일본 수출규제 고착화 우려 / 9
 - III. 확대되는 1인 가구와 보수주의 가족가치 / 15
-

발행인: 김세연

편집인: 이윤식

편집위원: 김원표, 김창배

간사: 김진솔

발행일: 2019년 8월 28일

발행처: 여의도연구원

인쇄: 디엔씨파크

금주의 이슈

금주(8월 넷째주)에는 지소미아 파기, 한일 경제갈등, 1인 가구 확대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한일 지소미아 파기의 배경, 의도, 파장 등에 대해 분석했으며, 제2편에서는 ‘강대강’으로 치달고 있는 한일간 경제전쟁에 대해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제3편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인구 변동 하에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1인 가구에 대해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보았습니다.

제1편: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배경, 의도, 파장 (이윤식 연구위원)

8.22(木) 18:20, 한국의 중단 결정으로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 2년 9개월(2016.11.23.)만에 파기. 文 정권의 의도는 △남북한 연방제 통일을 위한 북한과의 ‘공통분모’ 확보, △反日 정서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총선 승리’에 기여, △통미봉남 중인 김정은의 마음을 돌리려는 이유 등임. 그러나 향후 파장이 만만찮아 보이는 가운데, 美·日의 반응이 매우 직접적 워딩을 활용한 비판이란 점에서 우려가 큼. 이는 ‘북·중·러 vs. 한·미·일’이란 동북아의 전통적 안보 지형에 균열을 낸 것으로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韓의 외교적 고립 가속화로 이어질 전망

제2편: ‘강대강’ 대응으로 일본 수출규제 고착화 우려 (정인교 인하대 교수)

8·15 광복절을 전후하여 형성되었던 한일 갈등 완화 조짐은 정부의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 폐기로 ‘강대강’ 대결 장기화 구도로 전환. 文정부의 GSOMIA 폐기 결정에 대해 美日은 우려와 실망감을 표출했고, 일본은 수출규제 부담을 덜게 되어 對韓 수출규제 품목 확대와 첨단산업 생태계 교란에 나설 것으로 예상. 한일 갈등 고조로 대외통상 및 안보역량 약화로 경제 전반의 리스크가 고조될 것으로 전망. 이에 정부는 GSOMIA 폐기를 철회하고, 외교적 해법 모색으로 대외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함

제3편: 확대되는 1인 가구와 보수주의 가족가치 (김원표 사회정책실장)

대한민국은 세계 유례없는 급격한 인구변동으로 1인 가구수가 급증, 이로 인한 가족 형태의 변화양상은 매우 근본적임. 최근 전통가족 해체로 인한 ‘가족의 위기’는 보수주의 핵심가치인 가족가치(Family Values)를 소환할 정도로 성숙했음을 의미. 한편, 범람하는 자유주의 가치에 맞서 가족가치를 앞세운 문화전쟁이 오늘날 미국 보수주의의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음. 따라서 전통가치에 대한 믿음과 인구사회학적 변화라는 ‘한국형 이중주’에 대해 우리 보수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임

1.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배경, 의도, 파장

작성: 이윤식 연구위원 (☎ 02-6288-0548)

8.22(木) 18:20, 한국의 중단 결정으로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 2년 9개월(2016.11.23.)만에 파기. 文 정권의 의도는 △남북한 연방제 통일을 위한 북한과의 ‘공통분모’ 확보, △反日 정서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총선 승리’에 기여, △통미봉남 중인 김정은의 마음을 돌리려는 이유 등임. 그러나 향후 파장이 만만찮아 보이는 가운데, 美·日의 반응이 매우 직접적 워딩을 활용한 비판이란 점에서 우려가 큼. 이는 ‘북·중·러 vs. 한·미·일’이란 동북아의 전통적 안보 지형에 균열을 낸 것으로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韓의 외교적 고립 가속화로 이어질 전망

1. 현황

- 8.22(木) 18:20,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을 체결 2년 9개월만에 종료한다고 발표
 - 文대통령이 주재하고 총리와 안보관계 장관이 참여한 NSC 회의가 15시에 개최돼, 1시간 남짓한 논의 끝에 ‘최종 파기’로 결론
 - 발표문의 내용을 보면, “8.2(金) 일본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
 - “이에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협정 체결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료를 결정”

- 그런데 NSC 회의 개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요 언론들은 정부가 ‘파기’나 ‘자동 연장’보다는 ‘조건부 연장’에 무게를 뒀다고 보도
 - 조건부 연장이란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정보교환을 중단해, 협정의 실효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일본을 압박”하려는 전략
 - 그러나 외교부·통일부는 ‘조건부 연장’의 비현실성을 주장했고, 국방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 파기로 확정
 - 추후 일본이 “GSOMIA를 유지하면서 왜 정보를 교환하지 않느냐”란 반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외교부와 통일부의 논리
- 향후 관련 파장이 만만찮아 보이는 가운데, 美·日의 반응이 직접적 워딩을 활용한 비판이란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미국은 “文정권의 결정이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란 비외교적 표현을 썼으며, 美 언론들 역시 한미동맹의 균열을 걱정하는 상황
 - ※ △WP, “가장 큰 패자 한국, 가장 큰 승자 북한”, △WSJ, “동아시아 內 동맹 네트워크 악화”, △NYT, “북중러 위협 커지는데 韓美동맹 흔들”
 - 특히, 미국이 ‘실망(disappointment)’이라 표현하는 경우는 터키, 쿠바, 미얀마, 홍콩 경찰 등의 사례에서처럼 美의 최우선 가치인 자유·인권·민주주의가 공격받는다고 느낄 때만 사용
 - 한편, 일본도 “극히 유감이다”, “韓, 마음대로 해보라” 등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향후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
 - 특히, 일본은 8.28(水) 화이트리스트 개정의 강행과 전략물자 수출을 불허할 것으로 보여, 한국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2. 韓日 정보공조의 필요성

□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의미와 중요성

-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협정 당사국 간 상호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것으로,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첫 글자를 따서 ‘GSOMIA’라고 명명
 - 지소미아는 국가간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및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보호 의무와 파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단,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 교환만 함
- 우리는 NATO를 비롯해 총 34개국과 협정을 체결 중(일본, 33번째)이었으나, 이번에 일본과의 협정을 파기함으로 33개국이 됨
 - 문제는 韓日 GSOMIA가 양국 간 단순한 ‘정보공유’를 넘어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안보협력’의 핵심이란 점에서 상황은 매우 심각
 -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국간 주요 군사협력의 틀이자, 對中 견제를 위한 동북아 전략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
 - 특히, 미국은 6月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서 對中 견제를 위해 동맹국과 힘을 합칠 것을 강조했는데, 한국의 GSOMIA 파기로 同 계획에 차질이 발생
 - 이에 韓美동맹 관계의 악화는 물론, 동북아의 전통적 안보 지형인 ‘북중러 vs. 한미일’ 구도의 균열로 한국의 고립이 가속화될 전망

□ 한일 군사정보 공유의 필요성

-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SIGINT(signal intelligence), 즉 신호정보 포착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를 일본과 공유하면 양질의 對北 신호정보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
 - 일본 정찰위성 8대가 한반도 상공을 20분마다 촬영해 영상 정보를 확보하고, 한반도 전역의 통신감청이 가능한 시설을 19개소 확보해 각종의 對北 신호 및 전파를 점검할 수 있음
 - 또한, 일본은 EP-3 전자정찰기 16대, 조기경보기 22대, BMD능력 보유 이지스 구축함 8대 등으로 신호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해 대응
 - 일각에선 지금까지 공유된 대부분의 정보가 일본측 요청으로 이뤄졌고, 올해 8차례 정보 공유도 일본이 요청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과 다름

〈표 1-1〉 한국과 일본의 SIGINT 역량 비교

구분	일본	한국
정찰 위성	8대	X
도감청 시설	19곳	모름
EP-3 전자정찰기	16대	X
조기 경보기	22대	4대
BMD능력 보유 이지스함	8척	X

- 이러한 SIGINT 능력을 갖춘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효율적 북핵 대응을 위한 핵심 기반임
 -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정확한 사거리와 제원, 그리고 발사 원점 등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양국이 공유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음

※ 7.25(목) 북한 미사일 사거리를 수정 발표한 것은 GSOMIA에 기반해 일본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다시 받았기 때문(430km/690km → 2발 모두 600km)

- 또한, 文정부 이후 소원해진 한미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인 일본과의 GSOMIA로 이어놓을 수 있기 때문

3. 文정권의 GSOMIA 파기 의도

① 남북한 연방제 통일을 위한 공통 분모(공동의 적) 필요

- 남북이 ‘민족 공조’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식민 지배의 가해자인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므로, 조속한 폐기가 당연하다고 인식

- 특히, 주류 세력들의 주사파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GSOMIA를 격렬히 반대하고 있으므로 그들과 공통된 입장을 갖는 건 필수

※ 7.24(土) 이후 북한은 <노동신문> 및 각종 선전매체 등을 동원해 거의 매일 “친일 매국협정”, “전쟁협정, 평화파괴협정”이라며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

② 反日 정서의 지속적 유지를 통해 ‘총선 승리’에 기여

- 정부여당은 「反日 = 문재인 및 좌파진영」 vs. 「親日 = 한국당 및 자유우파진영」 프레임을 활용해, 총선 승리를 견인코자 함

※ 지난 7.30(火) 유출된 민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할 것”이란 내용을 적시해 논란

- 특히, 각종의 비리로 위기에 몰린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살리고, 향후 임명 강행에 따른 여론 악화로 지지율이 급락할 경우, 또다시 反日 정서를 부각해 분식(粉飾)하려는 의도

- “조국(曹國)을 살리기 위해 조국(祖國)을 버렸다”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밀리면 레임덕이란 우려 때문에 사활을 걸고 강행하려 함

③ 통미봉남 중인 김정은의 환심을 얻기 위한 차원

- 文대통령은 GSOMIA 파기를 통해 북한과 동일한 反美·反日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김정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거라 생각
 - 김정은은 지난 2월 ‘하노이 노딜’로 인한 망신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한의 중재 실패에 있다고 보고, 對美 직거래를 하려 하고 있음
- 이를 통해, 文은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기반을 조성하고, 김정은의 서울 답방 or 11월 ‘韓-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등 對北 이벤트를 활용한 지지율 제고에 이용

4. 향후 파장 및 전망

□ 전통적 한미, 한일관계 악화 불가피

- 미국의 입장에서선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동아시아판 NATO’를 설립하고자 했으나, 한국의 GSOMIA 파기로 차질이 발생
 -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다자안보협력체를 구축해 국방비도 절감할 계획이었으나, 文 때문에 문제가 발생
 - 이에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이외 전방위 안보청구서, 즉 호르무즈 파병, 중거리미사일 배치, 인도태평양 동참 등을 내밀 가능성
-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7.23(火) Bolton 방한시 우리측에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약 6조)를 제시했다고 발표(현재 1조 389억원의 5배 규모)

- 만약 文정권이 청구서를 받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감축(전투부대 6500명 철수)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보호료를 요구할 수 있음
 - ※ 현재 호르무즈 해협으로 우리 유조선과 상선 등이 1년대 약 1700여대 이상이 이동 중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료 명목으로 여타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음
- 특히, 美정부와 언론 및 조야의 반응을 보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할 수 있어 한미동맹이 중대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음
 - 美국무부는 “한국 결정에 깊이 실망했다”며, “韓방어가 복잡해졌고, 주한미군의 위협도 증대됐다”란 구체적 우려가 담긴 입장문 발표
 - 트럼프도 “김정은이 한미훈련에 불만이 있고, 나도 돈낭비라고 생각한다”며 GSOMIA 파기 후 한미동맹 관련 불만을 표출
 - 문제는 美조야의 반응인데, 이번 사태를 “을사조약 체결 이후 한국 정부의 가장 큰 전략적 오산”이라 평가할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임
- 일본은 그동안 한일간 안보협조 체제를 고려해 무역제재의 수위를 조절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강도 높은 경제 보복에 나설 것임
 - 일본은 8.28(水) 화이트리스트 개정 강행과 전략물자 수출을 불허할 것으로 보여,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커질 전망
 - 일각에선 일본이 다음 카드로 금융제재를 꺼내들 것으로 보는데, 급격한 자본유출과 자본비용 조달 급상승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 GSOMIA 파기로 한일 군사충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독도 상공과 해역 등에서 해·공군간 대치로 인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 불배제
 - ※ GSOMIA가 유지되던 작년 말,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우리 구축함 상공을 저공으로 위협 비행하는 등 일촉즉발 상황이 발생한 바도 있음

-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번 사태를 기회로 일본이 헌법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 추진을 가속화할 것인가 하는 점인데, 현재 아베 정부의 행보로 볼 때 개연성이 매우 큼

□ 북한의 행보 및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 향후 북한은 GSOMIA 파기로 촉발된 한미동맹 균열을 더 확대하기 위해 선전선동을 통한 모략책동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으로 전망
 - 우선, 북한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맹비난 하면서 한미 훈련의 완전 중단 등을 요구할 가능성
 - 또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종북단체들을 동원한 反美 시위와 집회를 꾸준히 개최하거나 지속적으로 선동할 것으로 예상
 - ※ 美 대사관을 포위하거나 핵성기를 동원한 업무 방해로 미국의 감정을 상하게 해 목적(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을 달성하려 할 것임
 -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은 현 미사일(5月 후 9차례) 발사를 넘어서 NLL과 DMZ에서의 재래식 군사도발 등으로까지 확대될 전망
- 그러나 문제는 文정권의 GSOMIA 파기를 통한 김정은 마음 사기가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한미동맹 균열로만 이어질 것이라는 점
 - 북한의 목적은 ‘핵보유국 인정’, ‘평화협정 체결 후 미북수교’ 등이기 때문에 文의 아부와 무관하게 당분간 미국만 상대하려할 것임
 - 특히, 김정은은 하노이 노딜 이후 文의 운전자론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對美 직거래 결정한 바, 통미봉남 지속은 불가피할 전망

II. '강대강' 대응으로 일본 수출규제 고착화 우려

작성: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8·15 광복절을 전후하여 형성되었던 한일 갈등 완화 조짐은 정부의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 폐기로 '강대강' 대결 장기화 구도로 전환. 文정부의 GSOMIA 폐기 결정에 대해 美日은 우려와 실망감을 표출했고, 일본은 수출규제 부담을 덜게 되어 對韓 수출규제 품목 확대와 첨단산업 생태계 교란에 나설 것으로 예상. 한일 갈등 고조로 대외통상 및 안보역량 약화로 경제 전반의 리스크가 고조될 것으로 전망. 이에 정부는 GSOMIA 폐기를 철회하고, 외교적 해법 모색으로 대외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함.

1. 대외 리스크 고조: 경제-안보 복합리스크

○ 한일 갈등 고조로 대외통상환경이 최악의 국면으로 진입

-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증대되고,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GSOMIA 폐기를 감행해 한일 관계가 '강대강' 대결 구도로 전환
- 대외경제 노출 비중이 가장 높은 한국 경제는 대외변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함에도 일본과 전면전에 돌입, 이로 인한 리스크 확대로 피해 확산이 우려
- WTO 「글로벌 무역분쟁의 잠재적 경제효과」 보고서: 글로벌 무역분쟁 악화시 2022년 한국의 실질 GDP는 3.34% 감소, 아세안(-4.1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감소 폭이며, 중국(-3.14%), 미국(-2.18%), 일본(-1.97%) 순임.

- GSOMIA 폐기에 대한 일본의 반발, 미국의 '심각한 우려'로 한미일 동맹체제 균열 및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려 증폭

○ 일본 수출규제 이후 취약성 드러낸 국내 금융시장

- 반도체 3개 소재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 여파로 원화 환율이 1,200원 대로 상승, 주가 수준이 20년 전으로 회귀하는 등 대외변수 악화에 취약한 한국 금융시장의 실체가 드러남
- 세계 자금 공여국 역할을 하는 미국·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계 자금 유출시 우리나라 금융시장 교란 가능성 증대
 - 對韓 글로벌 금융기관의 전체여신규모 2,894억달러(2018년 말 기준) 中 일본계는 563억달러로 15.6%를 차지. 일본계 금융 철수時 컨소시엄 형태로 국내에 투자한 다른 외국계 금융기관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037억달러로 BIS(국제결제 은행) 기준 적정보유액인 4,700억달러에 비해 약 700억 달러가 부족하며, 현금성 외환보유액도 적정 수준보다 적음
 - 중국 등과의 통화스와프(약정액 1,270억달러)가 체결되어 있으나, 위기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지 여부는 불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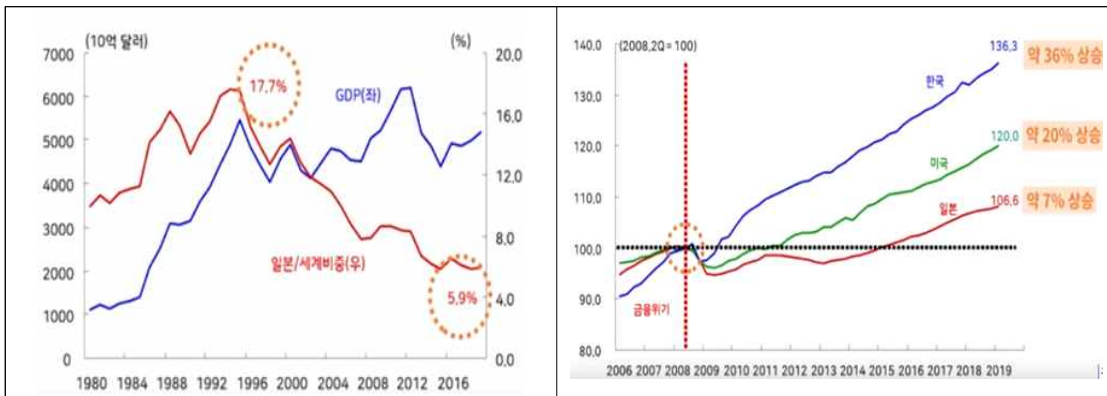
○ 한반도 정세 불안은 금융시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음

- GSOMIA 폐기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질 경우, 금융시장 교란이 더욱 심각해질 것임
- 개방된 금융환경에서 공격적 헤지펀드는 국내 금융시장의 취약한 고리를 집중공략할 것이라는 위기론이 최근 재부상

2. 일본의 한국 첨단산업 생태계 교란 무기체계화

- 일본의 장기 경제침체와 한국의 경제 위상 강화로 한일 경제격차 축소
 - 1995년 일본 GDP는 전세계 GDP의 17.7%에 달했으나, <플라자 합의>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거치면서 2018년엔 그 비중이 5.9%로 추락
 - 1965년 한일수교 당시 한일 국민총생산(GDP) 비율은 1:30였으나, 1990년대 중반 한국 OECD 가입시점엔 1:10, 2018년엔 1:3으로 축소

[그림 II-1] 일본경제 세계 GDP 비중 [그림 II-2] 한미일 GDP 증가 추이



-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와 트럼프식 대중국 무역제재 모방
 - 자국 통상법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보호무역주의, 특히 중국 첨단기업 화웨이에 대한 무역제재를 모방하여, 일본은 한국의 첨단산업 생태계 교란을 목적으로 자국의 4차산업 육성 지원 추진
 - WTO 통상규범상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 수단이 없는 일본은 강제 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책 수립의 압박 수단으로서 ‘전략물자 수출규제’ 방안을 모색
 -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법보다는 맞대응을 선택했고, 일본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한국 산업 상시 공격용 첨단산업 기술무기화 체계를 확립

3. 일본 수출규제의 파급경로

- GSOMIA 폐기로 일본은 우리나라를 ‘국제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로 폄하하는 동시에,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수단 발동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워져 필요시 對韓 수출규제를 감행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의 수출규제 의도는 시스템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산업을 겨냥하고 있으며, 자국 산업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한국 첨단산업 생태계를 교란하고자 할 것임
 - 한편, 삼성은 메모리반도체 생산 기술력과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양산 체제를 구축 중
 - 일본은 1980년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국으로 떠올랐으나, 美日 반도체협정 등 미국의 압력으로 산업기반 약화, 반도체 분야에서의 한국의 발전 등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밀려난 상황
 - 美 NVIDIA, 퀄컴 등은 반도체 설계기술, 생산은 파운드리 업체로 위탁. 삼성은 파운드리를 미래 핵심먹거리 분야로 간주하고, 이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대만 국유기업 TSMC를 능가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EUV 노광설비 투자 중
 - 만약 한일간 강대강 대결구도가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산업협력 체제가 약화되면 향후 차세대 첨단산업 투자에 지장 초래
 - 일본 금융기관의 투자금 회수 및 관련 국제 투자 컨소시엄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일본 핵심소재와 기계장비를 대체하려는 정부 지원책은 부분적인 국산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일본산의 완전대체는 과학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 무엇보다 첨단소재는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이 필요한데, 단기간 내

기초과학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한계

※ 일본의 경우, 기초과학 분야에서만 2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보유

- 수요가 소량인 첨단소재를 국내에서 개발할 경우, 원가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됨
- 향후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산업생태계 악화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
 - 첫째, 현재 최적의 글로벌공급사슬(GSC) 생산체계에서 이탈하게 되고, 생산단가 인상
 - 둘째, 수출규제 불확실성으로 장기간 재고비축 추가 비용 발생으로 경제적 부담 증가
 - 셋째, 화이트 국가 배제로 서류작성 및 심사 등 비관세 장벽 부담 증대
 - 품목별로 건건이 서류심사를 실시해 일본은 언제든 수출 지연/금지 명분 확보
 - 넷째, 소재부품, 장비뿐만 아니라 기술교류, 인력교육 등에서도 한일 기업 간 협력 활동 약화돼 일본으로부터의 기술 도입 중단
 - 다섯째, 가격경쟁력 약화와 제품 납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외 바이어가 경쟁사로 이탈할 가능성 증대
 - 여섯째, 기업환경 악화로 기업들은 일본의 특별우대를 받는 백색국가 혹은 핵심소재 조달이 원활한 국가로 이전
 - 일곱째, 최악의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현상이 우리 경제에서 현실화될 수 있음. 즉, '일본궤 한국 경제 장기황폐화' 우려

4. 시사점 및 대응 방안

- 나날이 악화되는 대외통상 환경 불확실성, 일본과 강대강 대결 구도는 우리 기업의 경영 악화와 경제 역(-)성장을 가속화할 것임
 - 외교적으로 관리 가능한 한일 관계를 우리 경제와 안보에 치명적인 리스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이 100%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를 자극하기보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과 같이 미래 지향적으로 한일관계를 설정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함

- 한일의 산업생태계 및 산업협력의 중요성 재인식이 중요
 - 첨단제품일수록 첨단소재가 필요하며, 진정한 ‘탈일본화’는 일본의 과학기술 수준을 능가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반일-친일’ 프레임 하 정치적 레토릭을 지양하고, 주변국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광양회(韜光養晦)를 추진

- 튼튼한 안보 없이는 과학기술 발전도 가능하지 않은 바, △기존 한미일 동맹체제 훼손, △한일 관계 악화, △경제적 리스크 확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GSOMIA 폐지를 철회해야 함
 - 또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포함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함

Ⅲ. 확대되는 1인 가구와 보수주의 가족가치

작성: 김원표 사회정책실장 (☎ 02-6288-0524)

대한민국은 세계 유례없는 급격한 인구변동으로 1인 가구가 급증, 이로 인한 가족 형태의 변화양상은 매우 근본적임. 최근 전통가족 해체로 인한 '가족의 위기'는 보수주의 핵심가치인 가족가치(Family Values)를 소환할 정도로 성숙했음을 의미. 한편, 범람하는 자유주의 가치에 맞서 가족가치를 앞세운 문화전쟁이 오늘날 미국 보수주의의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음. 따라서 전통가치에 대한 믿음과 인구사회학적 변화라는 '한국형 이중주'에 대해 우리 보수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임

1. 변동하는 '한국의 가족'¹⁾

○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격한 인구변동을 겪은 대한민국 사회

-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은 2018년에 이어 올해도 '1인 미만' 합계출산율이 확실히
- 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 이후 불과 17년만인 2017년 고령인구 14.2%로 최고속 고령사회에 진입,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²⁾

1) 이 글은 통계청 '2017 인구주택총조사',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 '2017년 혼인·이혼통계', '2018년 사회조사 결과', '2017 고령자 통계', '2018 고령자 통계'와 그 밖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 등을 참고하였으며, 별도 인용 표시가 없으면 통계청 관련 자료가 출처임

2)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함.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일본도 고령사회 진입에 24년 소요됨 (1970년 고령화사회 → 1994년 고령사회)

○ 한국 가족의 변화양상은 매우 충격적이며 근본적

- 평균 초혼연령 남자 32.94세 여자 30.24세, 초연령대 미혼인구 급증 등 비혼·만혼·저출산 추세가 고착화
- ‘평균 가구원수’ 2017년 2.48명 → 2045년 2.10명, ‘1,2인 가구 비중’ 2017년 55.4% → 2025년 62.4% 등 미니 가구의 대세 형성 예상
- 한편, 2017년 기준 결혼이민자, 귀화자 포함 다문화 가구 319천 가구, 가구원은 964천 명에 이르는 등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다문화가족 확산

2. 대세가 된 1인 가구

○ 지배적인 가족형태로 부상한 1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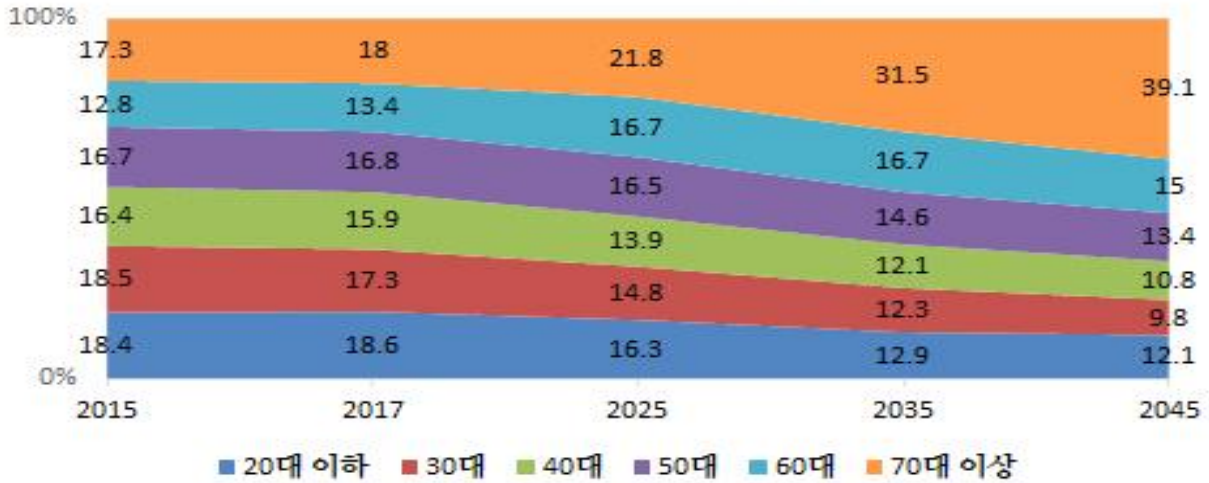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부부+자녀 가구 28.6%, 1인 가구 29.6%로 1인 가구가 부부+자녀 가구를 추월, 향후 1인 가구는 2025년 31.9%, 2045년에는 세 가구 중 한 가구를 넘어설 전망
- 2045년까지 연평균 1인 가구는 9만 7천 가구, 부부가구는 6만 가구씩 증가하며, 부부+자녀 가구의 감소는 연평균 8만 6천 가구로 예상

○ 1인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 가구주 성비(性比): 2015년 기준 남녀 비율은 각 50%였으나, 2045년엔 남성 비중이 52.1%(421만 6천 가구), 여성 비중 47.9%(388만 2천 가구)로 남성 가구주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
- 연령별 구성비: 2015년 △30대 이하 36.9%, △40~60대 45.9%, △70대 이상 17.3%이었으나, 2045년 △70대 이상 39.1%, △30대 이하 21.9%, △40~60대 39.2%로 청년층 감소와 고령층 증가가 예상

[그림 Ⅲ-1] 1인가구주의 연령별 구성비 추이

(단위 %)



- 시도별 1인 가구: 2015년 강원(31.2%), 충북(28.9%), 충남(29.5), 전북(29.8), 전남(30.3), 경북(30.4) 등 6개 시도가 1인 가구가 많은 시도이나, 2025년 기준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가, 2035년엔 17개 시도 모두 1인 가구가 대다수일 것으로 전망

3. 1인 가구의 유형별 특징

○ 청년 1인 가구: 비혼과 만혼이 빛은 청년 1인 가구 급증

- 인구 1천명 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은 2017년 5.2건으로 통계 작성(1970년) 이후 최저,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2.9세, 여자 30.2세로 10년 전에 비해 남자 1.8세, 여자 2.2세 상승
- 비혼, 만혼의 증가 원인은 △가치관 변화, △고학력·고소득 여성의 결혼 기피 현상, △안정적인 직업 및 소득 결여 등이 있음
 - 가치관 변화: “결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지속 감소,

2018년 48.1%에 달하는 등 비혼을 허용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2018년 사회조사 결과)

- 고학력·고소득 여성의 결혼 기피 현상: 인적자본에 투자한 기간이 길고,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층이 학력, 취업, 직업 등과 가정생활을 양립하지 못해 생기는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 등으로 혼인을 기피
- 안정적 직업·소득 결여: 고용불안, 높은 실업률, 비정규직화 등 경제적 요인으로 삼포세대화(연애, 결혼, 출산 포기), 높은 주택가격 및 전세가, 과도한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도 결혼 기피에 일조

- 청년 1인 가구는 ‘화려한 싱글족’과 ‘고단한 청춘’으로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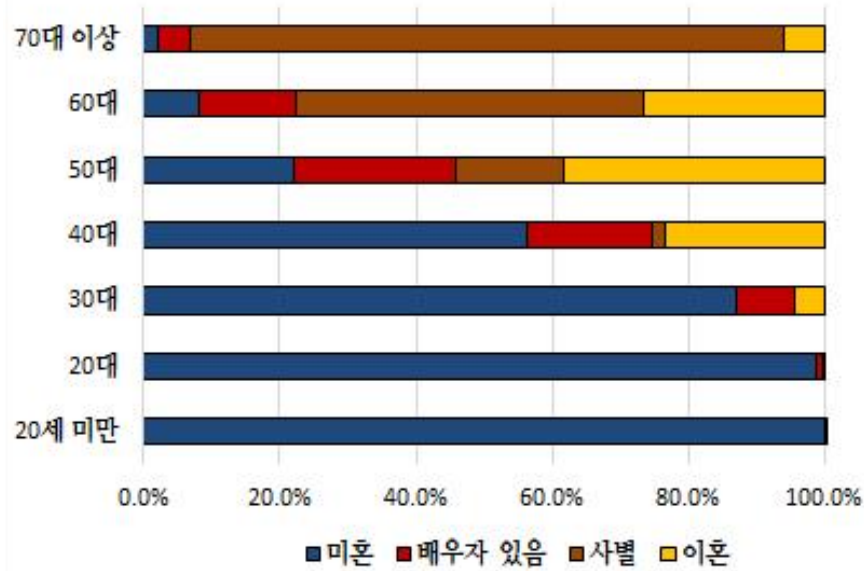
- 청년층 1인 가구의 양극화: 청년층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비교하면, △상용직 54.6% 對 31.6%, △전문가 40.5% 對 27.3%로 상용직과 전문가 비율에서 1인 가구가 우세, △임시직 18.5% 對 13.3%, △일용직 7.3% 對 4.7%, △실업자 5.0% 對 2.8%에서도 1인 가구 비율이 우세³⁾
- 화려한 싱글족: 고소득 및 높은 사회적 지위로 자발적 독신으로 운동과 문화생활, 여행을 즐기고, 사교활동에도 적극, 소비·문화 트렌드를 선도. 한때, 이들의 선호를 반영한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사무공간 복합공간 등의 개발붐이 일기도 함
- 고단한 청춘: 임시직이나 실업으로 인한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로 자신의 삶도 책임지기 버거운 청년들이 대다수인 바,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의료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훈련 등 사회적 지지 필요

○ 중년 1인 가구: 이혼과 별거로 인한 중년 1인가구 추세화

- 2015년 40·50대 중년 1인 가구의 혼인상태는 △‘이혼’ 23.3%, 38.4%, △‘배우자 있음’ 18.5%, 23.9%이며, 이혼과 별거는 각 41.2%와 62.2%를 점유

3) 강은나·이민홍(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Ⅲ-2] 2015년 연령대별 1인가구 혼인상태별 분포



- 2000년대 이후, 20~30대보다 40대 중년 이혼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 50대 이후 이혼율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
- 별거하는 1인 중년가구의 증가 원인으로 △산업체와 대학의 지방분산, △정부부처 및 국책기관, 공기업 지방이전, △높은 교육열과 교육자원의 서울 집중, △해외유학 급증 등을 들 수 있음
- 중년 1인 가구의 상당수는 낙오한 중년세대로 다인가구와 비교時, 중년층 1인 가구의 경제적 지위와 고용의 질이 현저히 열악
 - 상용직은 20.5 對 33.2로 1인 가구가 낮은 반면, △임시직은 17.2 對 15.1, △일용직 12.7 對 7.7의 비율로 1인 가구가 높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양자의 비율은 33.5 對 22.0. 특히, 단순노무종사자 다인가구는 15.8%인데 비해 1인 가구는 34.7% 압도적으로 높음(강은나·이민홍, 2016)
 - 1997년 IMF 금융위기 당시 20~30대가 오늘날 중년세대임을 감안할 때, 당시 극심한 사회경제적 위기가 개인과 가족의 위기로 전화되면서 사회의 주변으로 밀려 나갔을 가능성

- 노년층 1인 가구: 전통적 가치관 이완으로 폭발적으로 확대
 - 2015년 전체 1인 가구의 1/4에 미치지 못했던 노년층 1인 가구가 2045년 전체 1인 가구의 절반에 육박하며 1인 가구 확대를 견인, 향후 1인 가구 중 가장 지배적인 형태가 될 전망
 - 노인 부양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이완이 노년 1인 가구 확대 배경
 -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의식은 지속적으로 퇴조('08년 40.7% → '18년 26.7%) (2018년 사회조사 결과)
 - 노인 1인 가구 대다수는 배우자와 사별했음에도 자녀와 합가하지 않은 단독가구로 영위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

4. 보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 가족가치는 보수주의의 본질적 가치
 - 전통 가치를 옹호하고, 사회 체제의 유지와 안정적 발전을 추구하는 보수주의에 있어 가족가치는 세계보수주의를 관통하는 핵심가치
 - 자유한국당 강령(platform)인 '우리의 사명'과 당원의 신조(credo)인 '우리의 믿음'은 가족가치를 우리당의 핵심가치로 선언
 - 영국 보수당 대표였던 마이클 하워드의 '보수주의자의 신념'에서 제1의 신조는 가족가치⁴⁾
 - 미국에서의 가족가치는 자유주의적 세속화에 맞서 문화전쟁을 수행하는 보수주의 진영의 기치(旗幟)⁵⁾
 - 미국 보수주의 1980년대 레이건의 보수혁명과 함께 가족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부상한 기독교 우파는 미국 사회에서 보수주의의 큰 흐름을 형성

4)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과 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나는 믿는다.”
 5) 강명세(2009), 전후 미국 보수주의의 기원과 변화, 세종정책연구 5:2, 세종연구소

- 민권, 여성문제와 관련된 연방정부와 연방법원의 진보적 정책과 판결을 도화선으로 기독교 우파가 공화당과 제휴하며 정치적 동원이 이루어짐
 - 또한, 낙태 합법화, 학교예배 금지, 포르노와 동성애, 페미니스트 운동의 부상 등 자유주의적 풍조와 문화의 확산을 비판
-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족가치를 보유한 국가
 - 결혼, 동거, 이혼 및 부부의 성역할에 관한 가치 및 태도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은 일본·대만보다 보수적이고, 가톨릭이 지배적인 필리핀과 비슷한 정도로 매우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것으로 나타남⁶⁾

○ 이념적·단선적 접근보다 복합적·실용적 접근이 필요

- 새로운 가족 유형 등장을 사회병리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가족위기론’과 새로운 가족 형태를 대안가족으로 인식하는 ‘가족진보론’이 대립
 - 가족위기론은 핵가족을 이상적 가족형태로 보며 개인주의에 기인한 가족의 변화를 위기로 인식하는 반면, 가족진보론은 가족 변화를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모순에서 찾으며 한부모, 독신, 동거, 동성애 가족 등을 수용
- 현대 가족의 변화를 사회구조, 경제적 여건, 가치관 변화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하며, 가족위기론과 가족진보론 사이에서의 균형이 필요

○ 사회적 위험에 중점을 두면서 1인 가구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 추진

- 1인 가구는 동질적인 범주가 아니며, 1인 가구를 구성하게 된 동기나 1인 가구가 처한 상황은 연령대 및 계층별로 다양
- 1인 가구 확산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의 변화 초래가 예상되는 바, 단절과 고립, 사회통합 제약 등 사회적 위험 증가에 대비한 고용, 빈곤, 문화, 주거 등 복지 강화가 필요

6) 은기수·이윤석(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인구학 제28권 제1호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자유한국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